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



한옥진흥정책의 추진 현황과 시사점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이세진 연구원

요약

- '02년 전주시 및 서울시를 시작으로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꾸준히 제정되어 왔으며, 총 82개 조례가 운영 중에 있음('18.9. 기준)
- 대다수의 조례가 한옥 건축 및 수선 비용 지원과 관련되며, 최근 5년간 실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민간 소유의 개별 한옥 건축비 지원사업(총 1,230동, 442억원) 또는 한옥 공공 건축물 및 체험시설 건축비 지원사업(총 56개 사업, 3,495억원)으로 편중된 편임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이후 14개 광역지자체 및 1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로 변경·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정책방향 및 추진체계, 예산 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최근 5년간 한옥 진흥 관련 정책 사업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 한옥 관련 사업의 규모 및 투입예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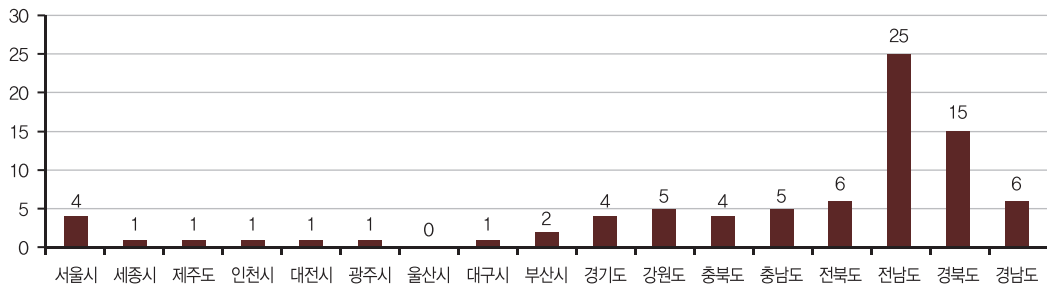
-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 수립과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적인 정책추진을 유도하고, 한옥 건축 직접지원 이외의 지자체 정책 운영 사례가 연계·지속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효과적인 한옥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실행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축분야 이외 정책 실무자 대상의 교육지원 확대를 통해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필요

1. 한옥 관련 법제 제정 현황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

- '18년 9월 기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하여 총 82개 조례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25), 경상북도(15), 경상남도(6), 전라북도(6), 강원도(5), 충청남도(5), 서울시(4), 경기도(4), 충청북도(4), 기타지역(8)에 분포함
- 지자체별로는 74개 지자체(광역시 15개, 기초 59개)에서 시행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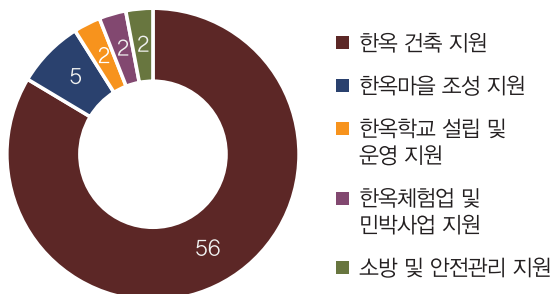
그림 1.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의 지역별 분포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례의 대상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과 관련한 총 82개 조례 중 ‘한옥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15개(14개 광역지자체 및 1개 기초지자체),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67개(4개 광역지자체 및 63개 기초지자체)
- 한옥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의 경우, ‘개별 한옥 건축(수선) 지원’과 관련한 조례에 편중됨

그림 2. 한옥 관련 조례에서 주요 지원 대상



- 그밖에도 서울시 및 전라북도 2개 지자체에서 ‘한옥밀집지역의 소방 및 안전관리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
- 강원도 화천군 및 횡성군 2개 지자체에서 ‘한옥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

- 부산시 등 5개 지자체에서 ‘특정 구역 또는 한옥마을’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상북도 부산시 기장군 한옥마을, 경주시 교촌한옥마을, 전라북도 정읍시 역사문화마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경상남도 김해시 전통문화의 거리’를 대상으로 함

- 서울시 종로구, 전라남도 목포시 등 2개 지자체에서는 ‘한옥체험업 또는 한옥민박사업’을 대상으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례의 제정 시기¹

- '02년 전주시 및 서울시를 시작으로 한옥 관련 조례가 꾸준히 제정되어 왔으며, '07~'09년 및 '15~'17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05년 전라남도 한옥지원조례 제정 이후, '07년부터 '09년 사이 전라남도 하위 기초지자체에서 다수의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남
- '15년 6월 한옥 등 건축자산법² 시행 이후, '15년 2개, '16년 7개, '17년 5개, '18년 1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한옥지원조례를 폐지·변경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3.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의 제정 시기 분포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례의 소관부서

- 지자체별로 해당 조례를 소관하는 부서의 경우, 건축 관련 부서(36개) > 민원·복지·행정 관련 부서(14개) > 도시 및 지역 개발·도시계획·도시경관·도시재생 관련 부서(13개) > 문화관광 관련 부서(9개) > 문화재관리 관련 부서(3개) > 소방예방 관련 부서(2개) > 녹지·경제·안전건설 관련 부서(각 1개) 순으로 나타남 (N=80, 소관부서를 특정하지 않은 조례 2개 제외)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이후 지자체별 관련 조례의 변화

- 기존에 한옥관련 조례를 운영하지 않던 지자체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지자체는 세종시, 제주도, 인천시, 대전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8개

¹ 기존의 한옥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로 변경한 지자체의 경우, 기존 조례의 제정연도를 기준으로 함

² 본고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한옥 등 건축자산법’으로 약칭 기술함

- 기존의 한옥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조례로 통합한 지자체는 서울시, 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5개
- 전라남도의 경우 유일하게 기존의 한옥지원조례와 한옥 등 건축자산조례를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시, 대구시, 경상남도 등 3개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한옥 관련 지원조례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기초지자체의 경우, 안동시에서 유일하게 기존의 한옥지원조례를 폐지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조례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됨

■ 지자체별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의 특이점

-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를 제정한 14개 광역지자체를 살펴보면,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관리, 한옥 건축 및 마을조성 지원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 법률 조항을 그대로 다루고 있음
- 또한, 대다수의 조례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건축문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1. 광역지자체별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 항목 비교

시도	조례 항목									
	건축자산 시행계획	건축자산 진흥구역	우수건축 자산	한옥 건축 지원 비용	조세	진흥 시책	특별 회계	전문산업 육성	기초조사 정보구축	홍보 지원
서울특별시	○	○	●	●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인천광역시	○	○	●	●	-	-	-	○	-	-
대전광역시	○	○	○	○	-	○	-	-	○	-
광주광역시	○	○	●	●	-	○	-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강원도	○	○	●	●	-	○	-	○	○	○
충청북도	○	○	○	●	-	○	-	○	-	-
충청남도	○	○	○	●	-	○	-	-	-	-
전라북도	○	○	○	●	○	○	-	○	○	○
전라남도	○	○	○	●	○	○	-	○	○	○
경상북도	○	○	●	●	-	-	-	○	○	-

○: 관련 규정 있으며, 개략적 내용 ●: 관련 규정 있으며, 구체적 내용 -: 관련 규정 없음

※ 한옥 등 건축자산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는 목록에서 제외함

•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관리 관련

- 대다수 광역지자체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기술 및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건축 및 대수선과 관련한 지원비용 및 지원시기,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의 경우 우수건축자산의 매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지원을 받아 건축한 한옥에 대해 공사 완료일 60일 안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관련
 - 대다수 광역지자체에서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서울시, 세종시,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의 경우 건축행위별로 비용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전라남북도의 경우 등록한옥 거주자를 대상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을 볼 수 있음
 -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관련
 - 서울시 및 전라북도의 경우 현장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련
 -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건축자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전문산업 지원육성 및 인력양성 관련
 - 서울시의 경우 유일하게 전문산업 지원육성 및 인력양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한옥장인인증제’ 도입 및 교육 추진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건축문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원 관련
 - 광주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남북도의 경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특징이 있음
 -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관련
 - 대전시, 경기도, 전라남도의 경우,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자산 기초조사 대상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건축자산 정보체계에 포함해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볼 수 있음
- * 1. 건축자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 자료 / 2. 건축자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 3.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자료 /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건축자산에 관한 시각 자료 / 5. 그 밖에 해당 건축자산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 기타

- 이 밖에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서울시의 경우 우수건축자산 뿐만 아니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의 매수, 서울 공공건축자산으로 지정, 등록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한 조사 실시 등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부산시의 경우 건축자산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 특징이 있음

2. 지자체별 한옥 관련 사업 추진 현황³

1) 최근 5년간 지자체 한옥 관련 지원사업 현황(지자체 자체 추진사업 기준)⁴

■ 최근 5년간 지자체 자체 추진 한옥지원사업 구성

-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총 56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총 349,571백만원⁵의 예산을 투입하여 그 중 약 301동의 한옥 건립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최근 5년간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한옥 공공건축물 및 체험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약 321,28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4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한옥 250동 건립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최근 5년간 광역지자체별 한옥 관련 자체 추진사업 비교

구분	사업비(순위)			사업량(순위)		
	관광숙박시설	공공건축물	총계	관광숙박시설	공공건축물	총계
서울특별시	40 (6)	11,374 (6)	11,414 (6)	1 (5)	8 (6)	9 (7)
세종특별자치시	0 -	0 -	0 -	0 -	0 -	0 -
제주특별자치도	0 -	0 -	0 -	0 -	0 -	0 -
인천광역시	0 -	0 -	0 -	0 -	0 -	0 -
대전광역시	0 -	0 -	0 -	0 -	0 -	0 -
광주광역시	0 -	252 (10)	252 (10)	0 -	1 (8)	1 (9)
울산광역시	1,468 (5)	900 (7)	2,368 (8)	1 (5)	1 (8)	2 (8)
대구광역시	0 -	0 -	0 -	0 -	0 -	0 -
부산광역시	0 -	0 -	0 -	0 -	0 -	0 -
경기도	0 -	41,584 (3)	41,584 (3)	0 -	47 (2)	47 (2)
강원도	8,000 (2)	14,750 (5)	22,750 (4)	8 (2)	37 (3)	45 (3)
충청북도	0 -	0 -	0 -	0 -	0 -	0 -
충청남도	2,033 (4)	533 (9)	2,566 (7)	5 (4)	8 (6)	13 (6)
전라북도	5,200 (3)	15,582 (4)	20,782 (5)	8 (2)	29 (4)	37 (4)
전라남도	0 -	43,682 (2)	43,682 (2)	0 -	29 (4)	29 (5)
경상북도	11,550 (1)	191,968 (1)	203,518 (1)	28 (1)	89 (1)	117 (1)
경상남도	0 -	655 (8)	655 (9)	0 -	1 (8)	1 (9)
총계	28,291	321,280	349,571	51	250	301

³ '17년 및 '18년 전국 179개 지자체(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162개(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한옥 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함(미응답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⁴ 최근 5년간('13년~'17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관련 사업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대다수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특징으로 인해 사업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조사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가 일부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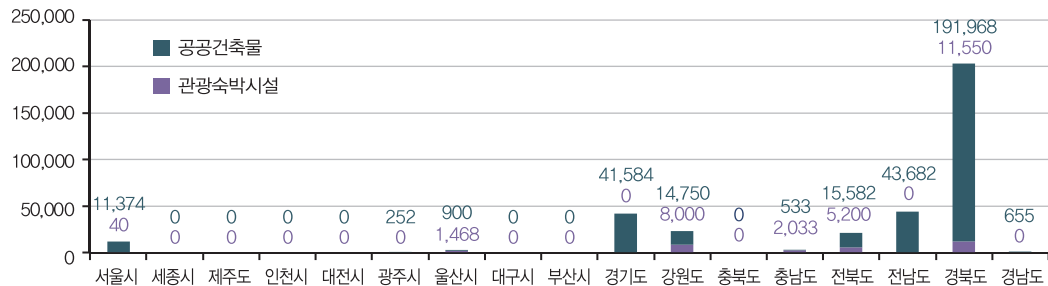
⁵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한 한옥지원사업은 한옥 복원 및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에는 한옥 건축 및 설비 구축 뿐만 아니라 부지 조성, 일반 건축물·시설물 조성 등의 비용 일체가 포함됨

- 그 밖에 한옥을 활용한 관광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업으로 약 28,291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한옥 51동 건립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 자체 추진 한옥지원사업 비교

-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총 203,518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가장 많은 수의 한옥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전체 사업 예산의 약 58%, 전체 사업량의 약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남도의 경우 경상북도와 동일하게 최근 5년간 11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단일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아 예산에 있어서는 4.6배 정도의 차이를 보임
- 그밖에 사업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 강원도 > 전라북도 > 서울시 > 충청남도 > 울산시 > 경상남도 > 광주시 순으로 자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 제주도,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충청북도의 경우 최근 5년간 자체적으로 한옥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광주시, 경기도, 전라남도⁶, 경상남도의 경우 한옥 공공건축물 및 체험시설 조성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자체적으로 추진한 반면, 관광숙박시설 조성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추진실적이 없는 특징을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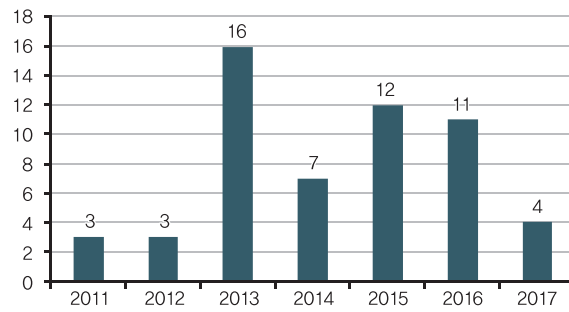
그림 4. 최근 5년간 광역지자체별 한옥 관련 자체 추진사업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 사업 추진 주체를 살펴보면, 전체 56개 사업 중 48개 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남
 - 광역지자체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한 6개의 사업이 있으며, 기타 추진 주체로는 경북개발공사에서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에 한옥시범주택 건립 지원사업, 전남대학교에서 한 브랜드 홍보관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⁶ 전라남도 행복마을조성사업의 경우, 민박체험 기능을 포함한 한옥지원사업 사례가 일부 있으나 한옥주택 건립 지원에 사업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개별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분류함

그림 5. 한옥 관련 지자체 자체 추진사업 연도별 분포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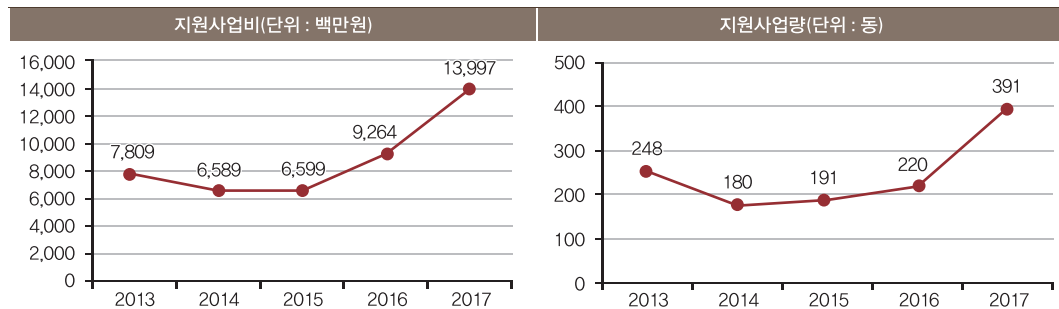
- 사업 추진 연도를 살펴보면⁷, '13년에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도별로 증감을 달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꾸준하게 지자체 자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2) 최근 5년간 지자체 한옥 관련 지원사업 현황(개별 건축물 보조금 지원사업 기준)

■ 최근 5년간 개별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사업의 변화 추이

-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 소유의 한옥을 대상으로 총 44,25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1,230동의 한옥 건축(신축 및 수선 등)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됨
 - 이를 평균적으로 추산하면 개별 한옥 당 약 3,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3. 최근 5년간 지자체 한옥 건축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변화



구분	사업비(단위 : 백만원)			사업량(단위 : 동)		
	합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합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2013	7,809	4,189	3,620	248	40	208
2014	6,589	3,111	3,478	180	42	138
2015	6,599	3,266	3,333	191	43	148
2016	9,264	4,830	4,434	220	90	130
2017	13,997	7,385	6,612	391	197	194
총계	44,258	22,781	21,477	1,230	412	818

- 최근 5년간 사업 변화를 살펴보면, '14년에는 전년대비 관련 지원사업의 규모(27.4%) 및 비용(15.6%)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16년과 '17년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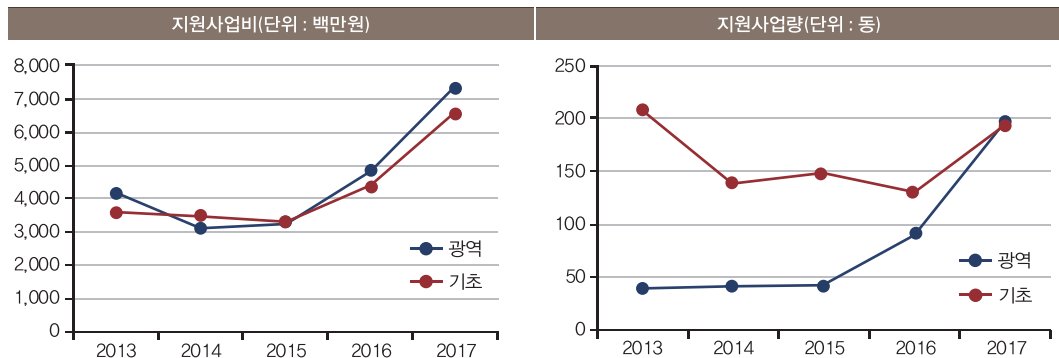
⁷ 대다수의 사업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시작한 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로 인해 '11년 시작된 사업 3건, '12년 시작된 사업 3건이 포함됨

- '17년 한 해 동안 민간 소유의 한옥 건축과 관련하여 약 391동, 13,997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16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약 1.5배, 사업량은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광역 - 기초지자체 단위별 개별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사업 비교

- 사업 추진 주체를 살펴보면, 주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해왔으나 광역지자체 단위의 추진사업이 '15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7년에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추진 사업량이 비슷하게 나타남
- 관련 예산의 경우 사업 주체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최근 5년간 광역-기초지자체가 비슷하게 지원한 것을 볼 수 있는데,
- 이는 기초지자체 추진사업의 경우 지방세 및 시·군·구비 등으로 구성된 자체 예산뿐 아니라 광역지자체의 지원예산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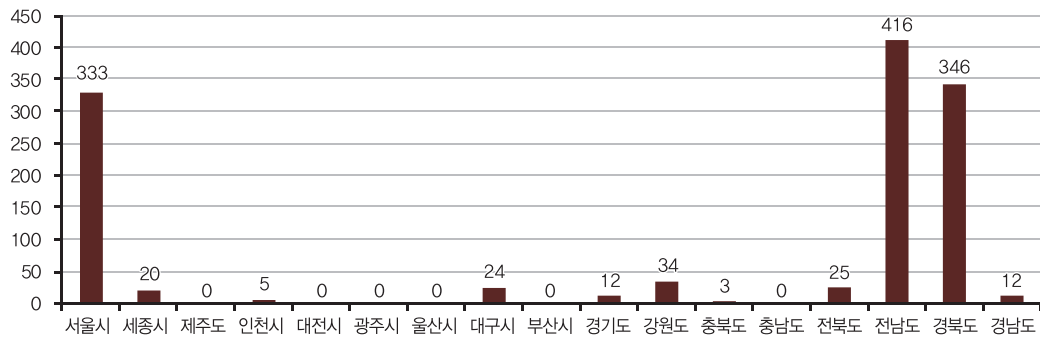
표 4. 최근 5년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별 한옥 건축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비교



■ 지자체별 개별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사업의 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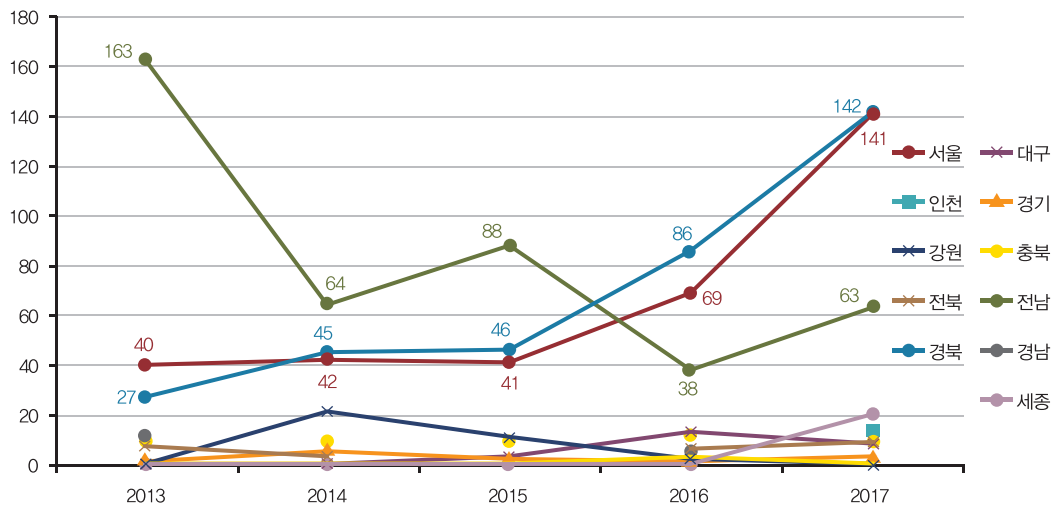
-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 4개 지자체에서 민간 소유의 개별 한옥 건축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1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으로 나타남
-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된 한옥은 전라남도(416동) > 경상북도(346동) > 서울시(333동)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지자체별로 사업량의 규모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밖에도 강원도(34동) > 전라북도(25동) > 대구시(24동) > 세종시(20동) > 경기도(12동), 경상남도(12동) > 인천시(5동) > 충청북도(3동) 순으로 조사됨
- 반면에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부산시, 충청남도, 제주도에서는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 최근 5년간 지자체별 한옥 건축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량 비교 (단위 : 동)



- 사업량이 가장 많은 상위 3개 광역지자체를 비교해보면, 서울시 및 경상북도의 경우 '13년부터 '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라남도의 경우 '13년 가장 많은 수의 한옥 건축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점차 하향곡선을 나타냄
 - 특히 '16년부터 '17년까지 사업 규모가 서울시의 경우 2배, 경상북도의 경우 1.6배 정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 상위 3개 광역지자체와는 대조적으로 나머지 지자체의 경우, 연간 20동 이내의 작은 규모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온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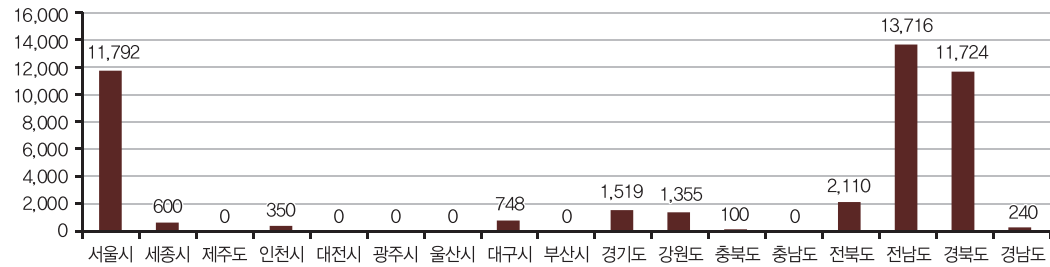
그림 7. 최근 5년간 광역지자체의 연도별 한옥 건축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규모 비교 (단위 : 동)



■ 지자체별 개별 한옥 건축 보조금 지원사업의 예산 비교

- 최근 5년간 개별 한옥 건축 지원사업의 추진성과가 있는 광역지자체를 기준으로 상위 3개 지자체 투입예산과 나머지 지자체를 비교하면, 적게는 6.5배, 많게는 137배의 차이로 지자체별 투입예산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8. 최근 5년간 지자체별 한옥 건축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3) 지자체별 한옥 관련 사업 담당부서 및 전담인력 현황⁸

■ 한옥 관련 사업 담당부서 분포 현황

- 한옥 관련 사업 담당부서를 살펴보면, 한옥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건축(41개) > 문화관광(30개) > 도시(15개) > 문화재(6개), 민원(6개) > 복지(2개), 미래전략(2개) 관련부서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례의 소관부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며,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 이외 관광·복지·민원·행정 등의 타 분야에서 한옥사업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서울시 한옥조성과,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 등 2개 지자체에서 별도의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유일하게 현장지원기구로서 한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특징을 볼 수 있음
- 이밖에도 경기도 수원시 화성사업소,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시설사업소 등 2개 지자체에서 별도의 전담기관을 두고 있으며, 하위에 한옥 관련 업무 전담 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한옥 관련 사업 담당부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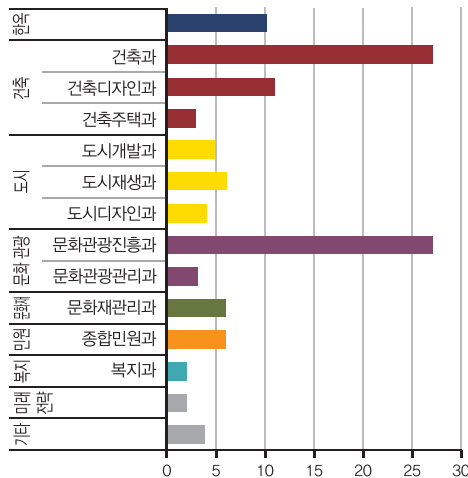


표 5. 한옥 관련 사업 담당부서 및 세부 업무내용

구분	담당부서	세부 업무내용
건축	건축과	건축계획, 건축개발, 건축정책, 건축행정, 건축허가 관련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 경관디자인, 건축문화 관련
	건축주택과	주택, 주거복지, 주거계획 관련
도시	도시개발과	지역·도시개발, 신도시 조성, 도시건설, 도시전략·행정 관련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주거재생, 주거환경정비, 주택관리 관련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 도시경관디자인 관련
문화관광	문화관광진흥과	문화관광 정책개발·진흥, 관광사업·마케팅, 문화예술도시 관련
	문화관광관리과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 관련
문화재	문화재관리과	문화재 관리, 문화유산 관리 관련
민원	종합민원과	허가민원, 민원봉사 관련
복지	복지과	주민생활 복지, 공동체 개발 관련
기타	-	산림녹지, 식품보전관리, 재난안전관리, 귀농귀촌관리 등

⁸ '18년 10월 기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통해 조사한 한옥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인력 현황을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 지자체별 한옥 관련 사업 전담인력 배치 현황

-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많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곳은 서울시(29명)이며, 그밖에 경상북도, 전라남도(각 5명) > 세종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각 2명) > 인천시, 대전시, 대구시, 부산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도(각 1명) 순으로 조사됨
- 광역지자체 중 광주시, 울산시, 충청북도의 경우 전담인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한옥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음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가장 많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지자체는 전라북도 전주시(17명)이며, 그밖에 서울시 종로구(6명) >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안동시(각 5명) > 강원도 강릉시(4명) > 서울시 은평구, 경상북도 경주시(각 3명) 등의 순으로 조사됨

3. 지자체별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⁹

■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추진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례 제정 이후,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 세종시, 경기도 등 3개 지자체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인천시, 대전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자체에서 수립 중에 있음
- 위의 8개 지자체에서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사업을 일부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사업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몇몇 지자체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과 우수건축자산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는 사례를 볼 수 있으며,
- 그 중 한옥과 관련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체부동 성결교회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¹⁰한 바 있으며, 10개 한옥밀집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서울시에서는 ‘16년부터 서울에 분포하는 한옥 중 좋은 사례를 대상으로 ‘우수한옥·한옥인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약 9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채의 우수한옥을 인증·관련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됨

⁹ '17년 및 '18년 실시한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업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함(N='17년 80건, '18년 82건)

¹⁰ '16년 서울시에서 매입·리모델링하여 '18년부터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로 활용 중에 있으며, 리모델링 과정에서 1930년대 민가에서 볼 수 있던 한옥의 꽃담이 발견되어, 복원작업을 거쳐 원형을 보존한 특징이 있음

표 6. 지자체별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8년 12월 기준)

시도	조례	시행계획	기초조사	진흥구역 지정	우수건축자산
서울특별시	2016.3.24.	2017.12.	2017년 1차 조사 완료 2018년 2차 조사 진행 중	10개 한옥밀집지역, 관리계획 수립 중	체부동 성결교회 (2017.2.지정)
세종특별자치시	2016.10.31.	2018.5.	2018년 1차 조사 완료	-	-
제주특별자치도	2017.3.8.	2019.4. 예정	2017년 1차 조사 완료	-	-
인천광역시	2015.11.16.	2019.10. 예정	2018년 조사 진행 중	-	-
대전광역시	2016.4.12.	2019.5. 예정	2018년 조사 진행 중	-	-
광주광역시	2017.11.1.	-	-	-	-
울산광역시	-	-	-	-	-
대구광역시	-	-	-	중구 향촌동 일대 (2016.9.지정)	-
부산광역시	2016.7.13.	-	-	-	-
경기도	2016.1.4.	2018.7.	2017년 1차 조사 완료	-	매항리 쿠니사격장 (2016.6.지정)
강원도	2017.11.3.	-	-	-	-
충청북도	2017.11.10.	-	-	-	-
충청남도	2017.4.20.	2019.8. 예정	2018년 조사 진행 중	-	-
전라북도	2016.12.30.	-	-	군산시 월명동 일원 (2017.7.지정)	-
전라남도	2016.12.22.	2019.11. 예정	2018년 조사 진행 중	-	-
경상북도	2015.12.31.	-	-	-	-
경상남도	-	-	-	-	-

4.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 추진사업 비교·분석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법 제24조 및 제33조와 관련한 정책·사업 추진

- 한옥 진흥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일련의 사업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한옥을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사업과 한옥 체험 및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민간 소유의 개별한옥에 대한 건축 비용과 한옥마을 조성 시 기반시설 구축 비용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한옥을 짓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사업성과는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24조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33조 건축문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와 관련지어 볼 수 있음

■ 일부 지자체에서 제7조, 제8조, 제9조, 제35조와 관련한 정책·사업 추진

-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12년부터 현재까지 한옥학교 운영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서울시의 경우 '16년부터 한옥장인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사업성과는 법 ‘제8조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제9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 지원’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음

- 또한 몇몇 지자체의 경우 한옥등록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중 서울시에서는 '10년 부터 등록한옥과 관련한 공사자료(공사도면 및 사진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등록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 이러한 사업성과는 법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음

표 7. 지자체 한옥 관련 추진사업과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비교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한옥 관련 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10조~제16조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제17조~제23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별 한옥 건축 지원	>>>	제24조~제27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한옥마을 조성 지원	>>>		
한옥학교 운영 지원	>>>	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한옥장인인증제 운영	>>>	제8조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	제9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 지원
		제30조	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 육성
등록한옥 관리시스템 구축	>>>	제6조	건축자산 기초조사
한옥등록제 운영	>>>	제7조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한옥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	제33조	건축문화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한옥 관광숙박시설 건립 지원	>>>		
		제34조	건축문화 진흥 관련 민간단체 지원 육성
우수한옥 인증 및 시상	>>>	제35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추진을 시도

5. 시사점

■ 기초지자체 대상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홍보 확대를 통한 관심 및 이해 제고

-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반면,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정 이후 관련 조례로 변경·신설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부족으로 해당 광역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정책 현황을 모르거나 관련 정책 추진계획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정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방향의 구체화 및 시범사업을 통한 실제적인 정책 추진 유도

-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로 변경·신설한 광역지자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실제 제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관련 정책·사업의 변화 없이 기존에 추진해온 개별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사업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옥R&D성과 등을 활용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화·정책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실제적인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및 컨설팅제도 도입 등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목포시·영암시 등이 선정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특히 근본적·지속적인 한옥 건축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써,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및 지원을 통한 한옥문화 저변 확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지원을 통한 한옥 산업화 기반구축 등의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 한옥 건축 직접지원 이외 정책성과가 연계·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 몇몇 지자체에서 한옥 건축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정책 이외에 한옥학교 운영, 우수한옥 인증제도 도입 등의 유의미한 정책 사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타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 운영 사례 홍보 및 공유 기반 구축이 요구됨

■ 한옥 관련 정책사업의 효과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의 협력체계 강화

- 최근 5년간 현황 조사결과 지자체별 한옥 관련 사업 추진 규모 및 예산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초지자체의 경우 관련 정책사업의 지속 추진에 있어 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도비 등의 예산 지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기초지자체의 요구 사업을 충실하게 포함시키고 실행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기초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도시건축위원회를 활용한 공모 등의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실행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건축 분야 이외 정책 실무자 대상으로 교육 지원 확대

- 기초지자체의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법 제정 이후 정책 변화, 유사제도와와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광역지자체의 경우 실제 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정책 운영 사례 공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따라서 정책 추진을 시작하는 지자체 대상으로 관련 법제 해설, 문화재·미래유산·건축자산 등 유사제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책을 운영 중인 지자체 대상으로 정책추진 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의 정책 실행단계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광·문화재·행정·복지·민원 등 건축 및 도시 이외 부서에서 한옥 관련 정책사업을 담당하는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한옥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 이후 한옥을 포함한 건축자산으로 정책 대상이 확대되고 관련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별도의 전문인력 충원 없이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진행함에 따라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건축 분야 이외 정책 실무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지속적·효과적인 한옥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서울시 및 전주시 등과 같이 각 지자체별 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통합 지원 기구 마련이 필요함

문의 | 이세진 연구원 sjlee@auri.re.kr
신치후 국가한옥센터장 chihoo1@auri.re.kr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박소현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9 www.hanokdb.kr

